

광주 지산유원지 도심 흉물 전략 왜?

市·동구청 수년간 감독권 행사 방치

70~80년대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광주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가 도심 흉물로 전략한 것은 수년 동안 운영 감독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은 광주시·동구청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산유원지의 관리·개발 책임을 맡을 법인들이 잇단 부도로 관리능력을 상실하면서 무등산 자락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쓰레기로 얼룩진 폐허로 전략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시와 구청은 물론 사업자 측이 도심상권 회생과 관광자원 복원 차원에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홍물 전략 과점 및 실패=지산유원지는 지난 1975년 호남관광개발이 민간자본 투자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유원지 시설지구인 '지산유원지'로 허가를 받아 문을 열었다. 93만㎡에 달하는 지산유원지는 호텔과 리조트, 놀이공원, 전망대 등을 갖춘 종합관광지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 94년 호남관광개발의 부도에 이어 무등산관광호텔과 지산유원지 관리권을 인수한 대의산업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유원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한 때 20여개에 달했던 음식점들이 모기업 부도 여파와 상권쇠퇴으로 10여개로 줄 데 이어 폐업한 업소들에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폐허로 전략하고 있다.

개발 책임 법인 잇단 부도 관리능력 상실
“문화수도 걸맞는 관광자원 육성 바람직”

지산유원지 향로봉에 있는 팔각정에 방치된 폐의자와 각종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것은 물론 철시한 상가들은 내·외부 마감재가 썩어가는 등 흉물이 되고 있다. 편의시설인 화장실 한 곳은 폐쇄됐으며, 그나마 유일할 차원에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리부실 원인, 활성화 방안 없다=광주시와 동구청은 현 유원지내 무등파크 호텔과 팔각점 등 주요 시설의 소유권자인 (주)나경인터내셔널 측에 지산유원지 관리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주체들이 잇단 부도로 유원지 개발 사업권을 상실한 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현 소유주인 나경측도 사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법규상 지산유원지 개발·관리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나경측이 보유한 토지비율은 33.2% 뿐이다. 나머지 66.7%는 사유지, 국·공유지는 1.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와 동구청은 나경측이 소유한 팔각점과 화장실, 철시한 상

가라도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원지 주민들은 광주시와 동구청이 지산유원지가 공공재인 만큼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홍철 지산유원지 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65)은 “광주시가 시민의 공공자산인 지산유원지가 흉물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도심 속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산유원지를 문화수도에 걸맞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사유지를 대폭 해제해 개인 소유자들이 건물 리모델링, 확장 등 환경개선 공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산유원지를 활성화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지만, 도심미관을 위해서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산유원지 내 상가와 각종 편의시설이 폐허로 방치되고 있어 외지인들에게 문화도시 광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온갖 악취와 오물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향로봉의 공중화장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도권 규제 완화·5+2 등 호남 죽이는 정책 아니냐”

■ 한나라-시도지사 정책협 무슨 얘기 오겠나

한나라당이 10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16개 시도지사 정책 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성토 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 시도지사는 정부의 국토 이용 효율화 정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철도 정책’으로 규정된 뒤 지방 경제를 죽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광대 광주시장은 “호남 민심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나 ‘5+2 광역경제권’ 등은 모두 호남을 죽이는 정책 아니냐”고 성토했다.

박 시장은 또 “규제 완화 후 MOU를 체결한 기업마저 ‘기다려 보자’며 지방 투자를 멈춘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미 수도권은 땅값·물가·임금·환경·교통문제 등 많은 면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서 ‘성냥갑’이 즐비한 도시가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대전시장 역시 “수도권은 규제 완화와 아니라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옛날엔 장남 한 명만 잘 키워면 모든 가족이 잘 됐지만 지금은 혼자 잘 살고 나머지는 준비박산이 난다”고 꼬집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했는지 묻고 싶다”며 “한나라당에서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모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뒷받침’인 영남지역의 반발도 거셌다.

김법일 대구시장은 “수도권 규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40년간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는 결국 고비용 저효율로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십 미터 앞에서 백 미터 경주를 시작하라는 게 제대로 된 룰이냐”고 꼬집었고, 김태호 경남지사도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중병들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방은 자생력을 키우길 원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을 집중 개발해 이익을 나눠갖겠다는 식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지사 등 수도권 지자체장 3명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시대적인 추세”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이날 정부의 정책을 설명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에 권한을 확실히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나 고민하고 있다”며 “중앙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각 정초위 원장, 이완구 예결위위원장, 정진섭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재안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 장관, 임재민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균형발전특위 ‘수도권 규제완화’ 공청회

“수도권 국세·지방세, 비수도권 이전해야”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정부의 국토 이용 효율화 대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은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정부 정책 비판=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결국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효과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기업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만을 노린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정홍 세종대 교수는 “도시 경쟁력은 입지비용 절감 외에 삶의 질, 창의성, 혁신,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부족을 혼잡·과밀·고지가 낮은 생산성 등에 의한 문제를 무시하고 규제만을 원인으로 지적,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경쟁력 제고라는 선분은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정부의 논리 부재를 질타했다.

조진형 금오공과대 교수는 일본 고

이즈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실패를 인용,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 조치는 단기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 멀지 않은 기간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등 일본이 상의 큰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여론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신설 대책과 관련, “지방교부세를 이틀만 바꾼 것”이라며 “세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 세금이 지방으로 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

서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산업 공동화를 안 된다”며 “지금 내려오고 있는 돈을, 그것의 이틀만 바꾼 것이 해결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 영구 등 선진국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경우는 우리나라와 속도와 정도가 다르다. 런던의 인구는 100년 동안 60만이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서울은 100년 동안 인구가 50배 늘어 25만 명에서 1천만 명 됐다”고 질타했다.

◇보안책 제시=이날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들이 제시됐다. 김성호 실장은 “(수도권) 개발의 직접이익은 비수도권으로, 간접이익은 추산이 어려우므로 수도권에 갖는 것이 타당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얻어지는 국세 및 지방세를 비수도권으로 재원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 정구역 체제 개편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보완책의 하나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내년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10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 재정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주최로 열린 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 독자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말 예산안 편성 시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는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세원이전으로서 이는 지방간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원이전의 방안을 채택 하되 분배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